

전통사찰 법적 보존 길 열려

헌법재판소 '선암사 경내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판결

주택공사에 의한 토지 강제 수용으로 수행환경과 재산권을 침해당한 부산 선암사(주지 정아가 전통사찰의 토지수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통사찰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공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선암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1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9인 중 7인의 다수의견으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의 입법목적은 '역사적 의의와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소유권 변동 주체나 형식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즉 전통 사찰 주지가 경내 토지를 처분할 때만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가 공용 수용할 때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게 한 것은 민족문화유산 보존이라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은 불가하다는 판례를 남겨 전통사찰의 법적 보존의 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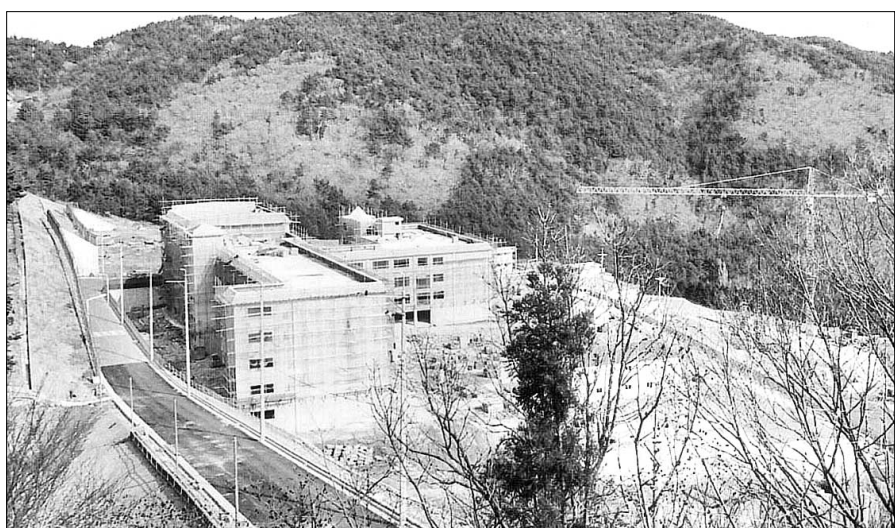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재판소가 위헌 결정 또는 단순한 헌법불합치 결정만을 선고할 경우, 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요건에 따라서 전통사찰을 실효성 있게 보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시까지 그 효력은 잠정적으로 존속한다"며 해당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했다.

94년 6월부터 사찰 토지 강제 수용 불가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벌여오던 선암사는 사찰에서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찰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돼 강제수용이 결정되자 지난 2001년 8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선암사 주지 정아스님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암사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한 부당함이 법적으로 입증된 만큼 현재 강제수용된 토지내에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5일 헌법재판소의 부산 선암사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총무원장은 논평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 및 환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족문화유산 보존은 국가의 의무" 선암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주택공사가 강제수용한 선암사 경내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일이 확정된 지 보름이 지나면서 후보로 나선 종하, 법장 두 스님은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종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두 후보 측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스님과 함께 14일 간담회에서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4일 이후에 종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보 추대식과 불교계 언론과의 인터뷰 등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 10일 전에 종책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종책선거가 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법규는 종현과 총무원장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명시된 10개 조항이 전부이고, 이들 조항조차도 금품수수나 인신공격 등을 금지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불과해 종책선거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종책 제시를 지연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종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시스템 때문이다. 후보들은 교구에서 선출된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321명의 선거인단 '표심'만 잡으면 된다. 따라서 여론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문중이나 계파의 이해관계에 몰두하게 되고, 바로 이런 법규정의 느슨함이 종책선거 요구를 수면 아래로 잠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종책선거' 왜 뒷전인가?

한 종회의원은 "선거기간을 20일 정도로 늘려 종책선거를 유도하고, 대신 종법 개정을 통해 타락선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거기간 총무원장 선거법 제11조에는 선거 기간을 10일로 못 박고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14-23일) 외에 후보자들이 신상명세나 종책공약의 개요를 공식적으로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것을

선거 10일전 종책제시 검증 시한 촉박 "선거인단 표심만 잡으면..." 여론 모르쇠

금지시켰다. 이렇게 본다면 후보자들이 자신의 종책을 제시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 이 같은 선거법이 마련된 것은 94년 개혁종단 때로, 장기간의 선거운동으로 야기되는 과열혼탁 양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0일로 종책을 제대로 알리고 검증받기에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우선 선거인단의 자격기준이 종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비구자력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고, 따라서 법랍 30년 이상의 총무원장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손상좌에게 허리를 굽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위계를 중시하는 승가풍토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종회의원 선출 자격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때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선거인단 선출 방법도 종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주지의 직권이나 문중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표가 몰릴 수 있고, 따라서 종책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24개 교구가 똑같이 10인의 선거인단을 갖는 것도 공정한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재적승 2천명 이상의 교구나 1백여명에 불과한 교구가 똑같은 선거인단을 갖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선거 관련 법규정 미비 후보등록 후 단 1회에 한해 종책을 교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종법 조항이 종책선거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금권, 타락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법규정 마련도 필수적이다. 종하, 법장 두 후보 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선거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종현종법이 94년 개혁회의 때 마련돼 바뀐 시대상황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실을 감안한 선거법이 마련돼야만 종책선거,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hwan@buddhapia.com



◇유정길 씨가 아프간 난민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아프간 담요·옷 긴급구호 필요 불자들 연기적 자비사상 펼쳐야

자원봉사하고 돌아온 유정길 씨

유정길 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왔다. 유정길 씨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폐허가 됐으며 난민들은 추위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씨는 13일 다시 아프간으로 떠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어떤가 —팔로만 들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했다. 수도 카불의 경우 20년 이상 지속된

언발에 오름니다. 또 긴급구호는 긴급일 뿐 장기적으로는 아프간 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계획은 —카불 북부인 탐다라 마을에 학교건립과 맴공사를 위해 주 정부로부터 부지까지 기증 받았다. 학교는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5-6월이면 공사가 끝날 것이다. 재료 지원은 정토회에서 하되 공사는 현지인이 무보수로 할 것이다.

200원이면 난민 1인 한끼식사 해결

전장으로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산업기반 시설도 완전히 마비되었다. 최근 아프간으로 난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시장에 버려진 빵 부스러기나 아채들을 주워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긴급구호물자로 담요와 옷이 필요하다. 아프간은 현재 겨울이지만 난민들은 텐트에 변변한 보온시설 없이 겨울을 나고 있다. 지난 해 한국에서 가져간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의 담요와 옷도 아직은

▲한국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아프간에는 국제 NGO 300여 개, 국내 NGO 5개 정도가 있다. 국내 NGO중 불교계는 정토회 하나뿐 나머지 모두 개신교계 NGO다. 불자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곧 우리라는 연기적인 자비사상을 펼쳐야 한다. 우리 돈 200원이면 아프간 난민 한 끼 식사가 해결된다. 후원 문의 : 02)587-8995, 계좌 : 국민086-01-0339-254(예금주 (사)한국제이티에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제31대 총무원장선거에 즈음하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21세기 첫 선거인 제31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동안 쌓아온 중단안정과 화합의 기초위에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부대중 모두는 이번 선거가 이천만 불자들의 위한 선거로 기록되기를 서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민족에 회향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산중공의와 원융화합의 전통을 되살리고, 수행과 승풍을 진작하며, 특히 종단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종책과 비전 중심의 여법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는 총무원장 후보자들과 선거운동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승가의 전통과 위위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 불교 발전으로 가는 탁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스님들께서는 맑은 혜안으로 후보자들이 제시한 종책과 비전에 따라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이번 제31대 총무원장선거는 저희 종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여법하게 치루는 것은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 종단의 선거 때 쏟아졌던 국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종도 여러분들께서 합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이번 선거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모든 종도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종단의 미래가 제시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호법신장이 되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종도 여러분께서 바라는 공명정대한 선거, 부처님 법에 따른 여법한 선거가 되도록 확고부동한 자세로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종현·종법에 따른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맑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종도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 청정과 화합의 전통이 진작되는 우리 종단의 진면목을 내외에 보여 주실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종정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종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